

한반도 통일과 안보정책

≡ 차례 ≡

1. 대북정책의 핵심 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입니다
2. 대북포용정책
3.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안보를 전략에 이용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입니다

1. 대북정책의 핵심 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입니다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보통 국가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아직 평화와 공존의 질서

가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대결적 분위기가 조성될지 모릅니다.

참여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길이라는 인식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2007. 8. 15)

□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책 계승할 것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어 왔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한국경제가 회복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이 동북 아시아가 좀더 개발되고 또한 동북 아시아가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통합되는 경제체제를 지향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아주 큰 희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 희망을 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핵문제만 잘 해결되고 나면 바로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국제적 사업과 자본을 좀더 조직해서 동북아를 개발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자, 이렇게 비전을 조금 크게 한번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외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아주 모

든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여야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2003. 2. 19)

□ 안보 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선택과 결단

제가 취임할 당시 북핵 위기는 무력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과 같은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위한 안보,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13합의는 북핵 폐기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육군3사관학교 제4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16)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정립하며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6·25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동족상잔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남북분단의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평화번영정책 추진의 주역입니다. 대북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각계 각층의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통일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의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03. 9. 24)

□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아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입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의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해야 합니다. 대결주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속지 않기 위해 온갖 나쁜 상황을 가정하여 불신과 적대감을 자극하는 일보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1. 23)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폐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기할 때까지 매우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

가고 마침내 남북관계, 동북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2006. 11. 2)

□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켜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실질협력을 확대하면서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교역이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해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존중의 협력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과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잘 풀어왔습니다. 균형외교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2007. 6.19)

□ 참여정부 평화정책은 미래 동북아 질서 멀리 내다보며 가는 것

참여정부의 평화정책은 멀리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미·일·중·러 간의 관계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는 지금도 제국주의와 냉전에서 비롯된 역사적, 이념적 앙금이 말

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잠재적 대결에 대한 미·일·중·러 간의 불신과 불안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또 상호 간의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더욱 더 가속화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동북아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더라도 평화의 공동체를 구축하지 못하면 문명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국만의 이익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에 의한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해 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상의 핵심입니다.

(제주평화포럼에서 2007. 6. 22)

□ 남북 함께하는 한반도 경제, 동북아 경제 성공하면 세계일류국가로 웅비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단순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 동북 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첫걸음은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나가야 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경제의 크나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역과 금융, 비즈니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 북한도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협력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성공사례로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풀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금융·물류 비즈니스 허브 전략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2007. 7. 19)

2. 대북포용정책

□ 공존의 지혜와 신뢰 회복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북지원 가지고 시비가 있습니다. 대북지원의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생각하고요, 2차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도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대가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북지원이 하나 거기에 해당되고, NLL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존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존의 방법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지 북한에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에서 2006. 6. 16)

□ 대북지원정책은 통일시대 대비한 투자

자꾸만 퍼 준다, 퍼 준다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여러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마셜플랜입니다. 전쟁 뒤 미국의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시작된 개성공단이 북핵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살려 가면 미국의 마셜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동북 아시아가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이 마지막에 중유 내라고 요구했는데 국내에서는 한국이 몽땅 뒤집어 쓰고 올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고, 사전에 그럴 거라고 예단하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행이 균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협상하는 사람한테 그거 다 달라는 대로 주고 와라 하면, 험하게 하는 것이 어서 안 되고 아무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더라도,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남는 장사입니다. 될 것이다 라고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제발 깨지만 말아 달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잘해 줘서, 저는 입 밖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동포 간담회에서 2007. 2. 16)

□ 북한은 개혁·개방 이외에 아무런 길 없어, 결국 속도의 문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 당국 간의 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여 뜨거운 동포애를 나누었습니다. 금강산에 이어 평양관광도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를 비롯한 남북 간의 4대 경협합의서도 발효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인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과 북한의 노동자가 한솥밥을 먹으며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적, 물적교류가 크게 늘어나면 남북 간의 신뢰는 한층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북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대화도 협상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03. 9. 24)

북한은 개혁·개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북한도 제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외에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개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개방할 것입니다.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그 판단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 또는 미국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공존할 수 있느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구조를 정착시켜서 협력하는 관계로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핵무기 버리고 개혁·개방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쌍방적인 상호 관계입니다.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 개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의 상징

과거에는 학자나 언론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냉전과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참으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신뢰구축과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위해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것을 비롯해 국민의 정부 5년간 83회 열렸던 남북회담이 참여정부 4년간 119회로 늘어났습니다. 투자보장, 이종과세 방지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13개 합의서도 발효되었습니다.

남북 간 교역이 참여정부 들어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지난 한해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10만 명 이상이 남북을 오갔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은 지난해까지 140만 명에 이릅니다.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도 올 상반기에 시범 운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개성공단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만 천 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우리 기업인과 함께 땀 흘리고 있고, 앞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7만 명 규모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군사요충지였던 이 지역이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 개막식 축사 중에서 2007. 3. 12)

□ 베트남, 중동특수 이어 세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어

베트남 파병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한국은 베트남 특수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번째는 국내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중동특수가 우리의 경제 고비를 넘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두 개를 기억합니다.

또 그런 특수는 없을까? 대통령 후보 시절 다니면서 세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열리고, 우리 도로가 우리 기차가 중국, 러시

아로 바로 연결되고 만주, 연해주 개방이 이뤄지고, 또 한국의 상품이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으로 기차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한국 경제가 또 한 번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되는 시기가 되면 한국 경제가 또 한 번의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힘차게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개성공단을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포 간담회에서 2007. 3. 26)

□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남북관계 전략

참여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용과 신뢰의 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경계하고 적대해서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장을 포용하고 역지사지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상대가 불합리하게 나올 때도 역시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로는 이처럼 어려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상호주의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해치고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구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녹슬었던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오고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지금 낭패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빠져 나가고, 잘 나가던 주가가 곤두박질쳤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서 해결이 요원한 일로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대북 강경책을 쓰지 않았고, 비상을 걸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도 않았지만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화지수가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남북관계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세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가는 길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와 원칙은 계속 유지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2007. 7. 19)

3.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의 문제는 신뢰의 부재

저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반규칙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그런 합리적인 행동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북한은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도 특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도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소위 합리적인 대화의 상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자 또 어려운 문제인 것이지요.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이 사이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호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저는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게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이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심각한 대결과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대결적 수단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2003. 2. 19)

□ 핵 폐기만이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

저는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해서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틀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 스스로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03. 9. 24)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관련된 제반 법령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별도로 정부는 미사일 발사 이후 시행된 대북지원 중단조치를 지속시키고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을 보류하는 등 이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진짜 성공

두 가지의 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좀 강경한 대응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강경한 수단으로, 어느 쪽에서는 대화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

니다만, 어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요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보다 온건하고 안정된 대화의 방법을 추구할 땐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조치해 나가야 할 때는 조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이 두 개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적절히 배합돼야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력행사라는 불행한 사태 없이 해결돼야 합니다.

또 다른 잣대로는 같은 성공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큰 성공입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는 성공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로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국제사회와 상의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2006. 10. 11)

평화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심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진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현명하고도 성숙된 행동과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하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녕과 경제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장의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2·13합의의 의미

북핵 문제도 지난달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합의를 통해 해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협의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북핵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합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2)

□ 이제 평화적 해결의 길로 확실히 들어서고 있어

미사일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많은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확대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 철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핵심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했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 해결의 길로 확실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9·19공동성명에 이은 2·13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와 동북 아시아의 다자 간 안보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구조가 정착되면 육로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한국 경제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6·25전쟁 57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2007. 6. 25)

4.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

□ 반북·반미 시비는 소통과 발전 가로막는 편 가르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 왜 반미(反美) 안 하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너 왜 반북(反北) 안 하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반북해서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반미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 20%의 경제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2050년이면 그 비중이 10%로 줄어든답니다.

한국은 2050년이 되면 약 6만 불 이상의 소득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몇 위 가는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미 하고 안 하고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적어도 자주독립국가로서 낮 뜨겁지 않을 수준의 자주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 자주·균형 외교와 점진적인 변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너 어느 편이냐?’하는 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렵습니다. 가끔 제왕론에 근거한 조언들이 많아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정책기획위 오찬 연설에서 2007. 1. 2)

□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별로 퍼 준 것도 없는데 보기에 따라 퍼 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지원은 꼭 해야 합니다. 투자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퍼 준다고 하고, 너 북한하고 친한 정권이냐, 친북 정권이냐 하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친북 정권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친북해야 합니다.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합니다. 북한을 우리하고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합니까?

친한 친구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미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과거를 극복할 것은 해야 합니다. 마음에 용서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국민들로서 잊기 어려운 일이지는 하나 옛날 일만 가슴에 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열어 가야 할 길을 열지 말자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해입니다. 이번에 잘 될 거 같고 되면 한국이 또 한 번 그야말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포 간담회에서 2007. 3. 26)

□ 경제 안정 위한 실속 있고 조용한 안보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장래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당장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도 걸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저런 부산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참모들의 걱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때에는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

각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보와 안전은 활력 있는 경제의 토대입니다. 평화가 위협을 받고 안보가 불안한 나라는 경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 또한 투자입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안보정책과 믿음직한 치안과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실속이 있는 안보가 필요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